



新고유가 극복을 위한 5대 실천전략 수립 추진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청와대에서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산자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GS칼텍스 등 에너지업계 대표, 민간에너지 자문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를 주재하였다.

산업자원부 정세균 장관은 '에너지정책 성과분석 및 향후 전략' 보고를 통해 최근의 고유가는 과거와는 달리 일시적 충격으로 끝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러한 新고유가를 극복하기 위해 ①더불어 사는 열린 에너지 실천전략 ②해외 자원개발 실천전략 ③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실천전략 ④에너지저소비형 사회구조로의 이행 실천전략 ⑤환경친화적 에너지 실천전략 등 5대 실

천전략을 발표하였다.

또한 정 장관은 고유가대책기획단 구성 운영 등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민간중심의 자율적 에너지 절약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공공부문에서는 여름철 냉방온도 준수, 승용차 요일제 운영 등 의무적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가 에너지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는 경제발전을 뒷받침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안정적 에너지공급의 책임을 완수하고, 기업은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시설투자를 과감히 추진하여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신뢰하고 에너지절약을 실천해 나갈 것을 강

조하였다.

아울러 정 장관은 5대 실천전략을 차질없이 실천하게 되면 지금의 에너지빈국에서 에너지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면서 2030비전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2030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세부계획 및 전략은 각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 발표되는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민간에너지 전문가, 관련업계 대표 등은 과거 정부와는 달리 참여정부에서는 에너지문제를 국가적인 아젠다로 격상시키는 한편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자원정상외교를 추진하는 등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동양 최대규모 1.2MW급 태양광발전소 착공

전남 무안군에 동양최대 규모인 1.2MW급 태양광발전소가 착공됨에 따라 무안군이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5월 17일 무안군 해제면 광산리에서 김군섭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고대석 무안 부군수, 영산강유역 환경청장, 유관기관 단체장 및 주민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양최대 규모인 1.2MW급 태양광발전소 기공식을 가졌다.

정부유자와 민자 합작으로 총 사업비 260억원이 투자되어 무안군 해제면 광산리 일원 2만여평의 부지에 착공한 1.2MW급 태양광발전소는 오는 10월 준공되면 400세대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발전

능력을 갖추게 된다.

앞으로 이곳에는 솔라 과학관, 에너지체험장 등의 솔라 테마파크가 계획되어 있어 새로운 관광명소로 각광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사업자는 (주)한라정공, 시공사는 (주)에너지솔루션즈, (주)포철기연, (주)솔라파워 등 4개회사가 공동 참여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전국에서 일사량이 가장 높고 태양광의 질이 최상인 무안에서 아시아 최대의 1.2MW급 태양광발전소가 기공식을 갖게 됨으로써 살아 숨쉬는 자연·청정 환경과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가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기본계획안 확정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석유개발비율이 오는 2015년에 18%로 높아지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5%까지 늘어나는 등 에너지·자원 기술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또한 오는 2011년 남극대륙 안에 제2기지를 건설해 세계 17번째 남극대륙 내 과학기지 보유국이 된다.

정부는 지난 5월 18일 김우식 부총리겸 과학기술부장관 주재로 제20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기본계획안 등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계획에 따라 2015년까지 총 12조 1,500억원을 투입, 석유공사와 민간부문의 해외유전 개발을 통해 독자적인 석유개발 비율을 4.1%에서 18%로 끌어올리고 에너지소비량은 5% 줄이기로 하였다.

또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발생률도 2015년 발생 전망치의 10%선인 1,750만TC 감축하고,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도 5%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에너지·자원부문에 47조 4,00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와 3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경제 전반에 적잖은 파급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행정복합도시와 혁신도시 등에 '친환경 에너지도시'(Eco-Energy City) 개념을 적용하는 방안 등 대형 융·복합화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부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에너지기술정책대학원이나 석유연구소 등을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에너지효율향상, 전략기술,

신·재생에너지, 자원기술, 온실가스처리 등 5대 기술개발사업에 집중기로 하고 이를 위한 108개의 에너지·자원 기술 로드맵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극지기초 과학 연구활동의 강화를 위해 오는 2011년까지 총 2,289억원을 투입해 기존의 세종과학기지에 이어 남위 70도 아래 남극대륙에 제2기지를 건설하고 종합해양조사선을 마련하는 등 연구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제2기지가 남극대륙 위에 건설되면 우리나라는 향후 전개될 남극 영토권 경쟁에서 발판을 마련하게 되며, 기존의 세종과학기지에서는 불가능했던 남극의 빙하와 고층 대기, 물리, 운석의 연구활동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국산 풍력발전기 750kW급 내년부터 시범 보급

외국산 설비에 전량 의존해 왔던 풍력발전기가 드디어 국내 순수기술로 만들어져 보급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001년부터 중대형 풍력발전기 국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현재 750~3000kW급 용량별로 국산화 개발을 추진 중이며 750kW급 중형 풍력발전기의 경우 지난 2004년에 개발이 완료, 기술 신뢰성 검증과 국제인증 취득을 위해 가원도 대관령 소재 풍력실증단지내에 오는 12월 완료를 목표로 실증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실증연구를 추진중인 모델은 효성의 기어드 타입과 유니슨의 기어리스 타입으로 산자부는 이에 따라 국제인증을 취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부터는 750kW급 국산 풍력발전기 시범 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급대수는 약 10여기, 총사업비 150억원 규모로서 설치장소는 유니슨과 효성 등 제작사들이 강원도를 비롯한 지자체와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산자부는 시범보급 사업을 통해 2~3MW급 대용량 풍력발전기 국산화도 가속화될 것이며 국산 풍력발전기의 상업운전 경험을 토대로 중국과 인도 등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설비 국산화에 따른 풍력발전 단가저감과 고장시 신속한 A/S 등 풍력발전 보급상의 애로요인 해소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UAE에너지안보 협력강화 미래지향 관계 구축

지난 5월 13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셰이크 칼리파 빈 자에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우호 협력관계를 한 단계 격상, 새로운 차원의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자원·에너지 분야를 비롯 교역, 건설, 플랜트, 투자, IT 등 다방면에 걸쳐 양국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고, 역내 경제 허브로서 협력증진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번 UAE 방문은 지난 1980년 양국 수교 이후 한국 대통령으로서의 첫 방문이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경제, 무역 및 기술협력 협정을 비롯 원유 국제공동비축사업, IT 협력,

자원·에너지 협력, 중소기업 분야 협력, 건설 협력, 투자 협력 양해각서 등 모두 6개의 정부, 비정부간 협정 및 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앞으로 지원협력을 위해 교역규모 확대 차원을 넘어 공동이익 창출이 가능한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장기적 원유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원유 국제공동비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유 국제공동비축사업은 한국 잉여비축시설에 산유국의 원유를 저장하는 사업으로 한국은 임대수익을 획득하고 비상시 원유 우선구매권을 확보하는 한편 산유국은 동북아 시장을 위한 판매거점을 확보할 수 있는 상호 이익 모델이다.

양국은 또 UAE의 주요 건설, 플랜트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

기업의 진출을 지원기로 했으며, 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두바이에 '중동 아프리카 플랜트·건설수주 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양국 정상은 향후 UAE의 풍부한 석유, 가스 자원과 자본력, 한국의 개발경험과 기술력 및 자본을 결합해 상호 보완적 협력 원칙 하에 공동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UAE측은 한국과의 IT, 항공, 건설 및 관광협력 확대에 관심을 표했으며, 한국측은 UAE의 장기 안정적 원유공급에 사의를 표명하고 UAE의 경제개발과정 및 산업구조 다변화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능력과 의사를 전달하는 한편 한국 기업의 참여를 위한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요청했다.

국내 첫 목질계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소 준공

톱밥, 버려진 나무, 볏짚, 왕겨 등을 원료로 전기를 생산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된 열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목질계 바이오 에너지 열병합발전 시대가 열렸다.

(주)케너텍은 지난 5월 23일 대구시 서구 중리동에서 국내 처음으로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총 공사비 350억원이 투입된 이 발전소는 나무 등 목재로 만들어진 칩(Woodchip)을 하루 평균 145t을 사용해 스팀 52t/h, 전기 50kWh를 대구산업단지 내 8개 업체에 공급하게 된다.

목질계 바이오매스는 광합성 과정을 통해 자라는 모든 식물군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활용한 열병합 발전이 도심지에서 이뤄짐으로서 발전소 입지난

해소, 연료비 절감, 대기환경 개선 등 환경·경제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산림 및 생활주변에서 수거할 수 있는 간벌목과 폐목재의 양을 연간 400만t으로 추정하고 이를 전부 이용할 경우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의 32%에 달하는 연간 160만toe의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각종 개발현장에서 발생하는 목질계 바이오매스는 대부분 재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되거나 매립되는 실정이다.

이원걸 산자부 제2차관은 "상반기에 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장의 민간투자 유도를 위해 발전차액 지원대상에 바이오매스를 새롭게 포함시키고 바이오매스의 안정적 공급과 연료화 사용 확대를 위해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 기관과의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북아 에너지분야 실질적 협력방안 논의 본격화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주도로 동북아 에너지분야의 실질적 협력방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동북아 에너지협력 '제1차 에너지계획 및 정책 실무그룹회의(WG-EPP)'가 지난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UN/ESCAP 주관으로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었다.

이 실무그룹은 동북아 지역의 자원보유국과 대소비국간의 협력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우리나라의 주도하에 추진해 온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일환으로 작년 11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출범한 동북아 4개국(한국, 러시아, 몽골, 북한)간 에너지협력을 위한 '정부간 협의체'인 고위당국자 위원회(SOC:Senior Officials Committee) 산하 실무그룹(WG: Working Group)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마련한 WG-EPP 국가에너지보고서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각국의 구체적인 보고서 작성 실행계획 및 일정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오는 10월에 개최 예정인 2차 WG-EPP회의에 각국의 국가보고서 최종안을 제출키로 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11월 '제2차 고위당국자 위원회(SOC)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번 1차 실무그룹회의는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주도로 역내 에너지분야의 실질적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는 SOC 비회원국인 중국 및 미국이 옵저버

로 참여함으로써 향후 양국의 SOC 참여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각국의 국가에너지보고서 작성을 통해 동북아 국가간 에너지 정보교류 및 협력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실무그룹 활동을 통해 각국의 에너지시장 현황, 수급상황 및 투자계획 등 역내 국가간 정보공유를 우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산자부는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에너지협력 '정부간 협의체'의 비전인 '2020년까지 지속가능한 방법 안에서 에너지협력을 통한 동북아의 개선된 에너지 안보'를 도모함으로써 새로운 지역에너지 협력의 틀을 갖춰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부터 주요 전자제품 '대기전력 1W기준' 강화

산업자원부는 TV, 컴퓨터, VTR, 오디오 등 기존 11개품목에 대해 대기전력과 오프모드 기준을 강화하고 라디오카세트와 비데 등 2개품목의 신규지정 등을 골자로 하는 '대기전력 저감프로그램 운용규정' 개정안을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판되는 제품 중 이 기준을 따르는 에너지절약형 제품에 한해 에너지절약마크를 붙일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규정에서는 기존 '자체시험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제조업체가 자발적으로 자체 시험한 시험성적서를 사용토록 해 제조업체의 자체시험을 확대해 업체의 적극적 참여 유도와 에너지절약 제품 보급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개정으로 연간 190

억원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며 '가전업체의 기술개발 유도과 국가 에너지절약을 위해 대기전력 품목확대 및 기준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호주에 이어 세계 3번째로 대기전력 1W이하 달성 국가 로드맵 'Standby Korea 2010'을 발표하고 2010년 의무적 대기전력 1W 정책시행을 선언하는 등 국제적 대기전력 저감운동을 선도하고 있다.

실제 사용하지 않는 기기가 계속 전기를 빨아먹어 '전기흡혈귀'라고 불리는 대기전력은 전자제품을 실제 사용하지 않으면서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아 두리모컨 신호대기 등으로 낭비되는 전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구당 월 3만5,000원, 국가 전체로는 연간 5,000억원씩 낭비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바이오에탄올 국내 도입을 위한 실증연구 추진

바이오에탄올의 국내 도입을 위한 실증연구가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5월 10일부터 휘발유 차량에 사용할 수 있는 바이오에탄올 유통시스템에 대한 실증연구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내년까지 2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와 교토협약에 따른 이산화탄소 감축 의무화에 따라 휘발유의 대체재로 친환경적인 바이오에탄올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해 12월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개정, 바이오에탄올을 MTBE를 대체하는 합산소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산자부에 따르면 향후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바이오에탄올의

가격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바이오에탄올 자체의 수요증가 등에 따른 가격 불안정성 문제와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만큼 장기적인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해외플랜테이션 추진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동차 적용 측면에서는 현행 휘발유 자동차에 E-10(휘발유에 에탄올 10% 혼합)까지 사용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에탄올 혼합 휘발유는 일정량 이상의 수분이 혼합되면 휘발유와 에탄올이 서로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 연료로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국내 유통을 위해서는 수분유입 방지를 위한 밀폐형 저장탱크 사용, 최종 출하시점에서 에탄올과 휘발유의 라인 브랜딩 등 별도

의 추가 보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바이오에탄올 유통시스템에 대한 실증연구사업'은 이같은 바이오에탄올의 적용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내년까지 정유업계, 자동차업계 등과 공동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바이오에탄올이 휘발유와 혼합돼 제조, 유통, 저장되고 실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유통시스템을 모사, 주기적인 사료채취 및 시험분석을 통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유통 인프라 구축 방식을 제안하게 된다"고 전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과제공고, 평가 및 주관기관 선정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2008년말 까지 비축시설 1억4,600만배럴 규모 확충

정부는 앞으로 거제, 여수, 울산 지하비축기지 등 3차 비축기지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2,980만배럴의 시설용량을 추가하고, 중동 산유국과 국제공동비축사업을 확대하여 2008년말까지 비축시설(저장용량)은 1억4,600만배럴 규모(146일분, 비축유 1억4,100만배럴(126일분, 공동비축 포함)을 확보하는 등 비상시를 대비한 석유수급 체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06년 3월 현재 우리나라 석유류 비축량은 1억4,980만배럴(민간 7,720만배럴 포함)로 하루 순수입량 기준 111일분(민간 55일분 포함)에 달한다.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1999년 노르웨이와의 공동비축을 시작으로 잉여비축시설에 산유국의 원유

를 저장하는 국제공동비축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대상국가를 중동으로 확대하고 있다.

2006년 2월 현재 노르웨이 등으로부터 총 1,990만배럴의 원유 및 석유제품을 저장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순수입량기준 16일분에 해당한다.

올해 중에는 지난해 총리 중동순방시 쿠웨이트측과 합의한 바에 따라 쿠웨이트와 공동비축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올해 3월 대통령의 알제리 순방시 합의한 바에 따라 알제리와 공동비축사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국제공동비축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올해말 2,500만배럴의 국제공동비축유를 유지하게 되며, 국제공동비축유에 대해서는 비상시에 우선구매권을 발동하여 국내 석유수급에 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1차 한·미 에너지실무협의회’ 개최 상호협력 증진

산업자원부와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제1차 한·미 에너지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양국간 에너지분야의 정보교환 및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개최되었으며, 국제 에너지시장 전망 및 양국의 주요 에너지정책에 대한 의견이 교환되었으며 특히 한국의 FutureGen 프로젝트 참여 등 양국간 에너지 기술협력 방안이 중점 논의되었다.

국제 에너지시장 전망에서 미 에너지부 산하 에너지정보청(EIA)은 주요 석유 생산국에서의 정치적 불안 등으로 당분간 고유가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양국은 향후 미 EIA와 한국의 에너지통계·분석 기관간 공동 세미나 개최, 인력교류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양국 에너지정책에서 미국은 2005년 제정된 ‘에너지 정책법’의 주요 내용으로 에너지 공급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해외 의존도 저감, 바이오연료·수소연료전지·청정석탄기술개발 촉진 및 에너지효율 증진대책 등을 소개하였다.

한·미 원자력 협력과 관련하여 한국측 대표단은 우리나라 원전 건설기술의 우수성과 해외 진출 현황을 설명하면서 한국 원전업체의 제3국 시장 진출시 미국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에너지 기술협력과 관련 FutureGen 분야에서 한국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참여 서한을 전달하고 협력방안 등 참여계획을 설명하였으며, 수소연료전지 분야 국제협력체인 ‘수소경제 국제 파트

너쉽(IPHE)’을 통하여 공동연구 과제 발굴 및 전문가 교류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기후변화 관련 협력방안에서 한국은 아·태 기후변화 6개국 파트너쉽(APP)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가칭 ‘청정기술개발 및 확산을 위한 기금’의 설립 필요성과 조성 방법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산업자원부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 및 기술협력을 위한 국제협력 정책의 일환으로 주요국과의 양자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회의는 97년 이후 중단되었던 미국과의 에너지분야 협력채널을 재구축하였다는데 의미가 크며 향후에도 에너지 전반에 관한 실질적인 협력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집단에너지사업 민간자금 활용 대기업 시장진출 기대

집단에너지사업에 있어서 민간자금 활용방안이 표면화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집단에너지사업의 향후과제의 하나로 자체 투자재원을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또 향후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점차 감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집단에너지시장에서도 소형열병합발전 시장과 같이 자본력 있는 대기업들이 사업권 취득시에 우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또 지난해말 ESCO 및 집단에너지 업계의 뜨거운 논쟁의 주제였던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민간자금 유치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 관계자는 “현재 집단에너지사업의 수혜자는 전국의 약 10%에 불과하다” 며 “향후 집단에너지

사업이 확대 보급돼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을 감안해 예산 감축 방안을 검토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정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민간자금을 활용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사업추진의 안정성 및 신뢰성 차원에서 자본력이 있는 기업들이 사업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다” 며 집단에너지시장에 대기업 진출 기반이 마련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산자부는 올해 지역냉난방사업에 591억원, CES 사업에 74억원,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에 74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소요자금의 80% 이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집단에너지사업 지원시 특정기업에 자금이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 지원할 방침이다.